

#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홍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6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6. 11.

발 의 자 : 홍석준 · 추경호 · 송석준  
김정재 · 김용판 · 이헌승  
강대식 · 배현진 · 이철규  
박성중 · 윤재옥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

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고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미미한 실정임. 고용유지 등 기업승계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여, 독일 및 일본 등 외국에서는 적극적인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이용 실적이 매우 높은 반면에,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바라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.

특히,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CEO의 27%가 60대 이상으로, 70대 이상 업체가 1만개를 넘어서고 있어서 기업승계 문제는 이미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.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. 이에 그동안 기업 현장에

서 제기된 기업승계의 걸림돌을 해결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가.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(안 제18조제2항제1호).

나. 사후관리의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(안 제18조제6항).

다. 자산유지 의무를 현행 80%에서 50%로 완화하고, 주된 업종의 변경을 허용함(안 제18조제6항제1호).

##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 중 “10년”을 각각 “5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7년(제2호의 경우에는 5년)”을 “5년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“20(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)”을 “5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(주된 업종의 변경은 해당하지 아니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호 마목1) 및 2) 중 “7년간”을 각각 “5년간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(기초공제) ① (생략)	제18조(기초공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금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<u>10년</u>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del>-5년-</del> ----- -----

다]의 상속(이하 “가업상속”이라 한다)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

가.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  
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 
경우: 200억원

나. 다. (생략)

## 2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(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)부터 7년(제2호의 경우에는 5년)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(제1호가목만 해당한다)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

---

---

---

---

---

가. -----5년-----  
-----  
-----

나. 다. (현행과 같음)

## 2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5년

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.

1.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.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(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) 이상을 처분한 경우
- 나.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다.·라. (생략)

마. 다음 1) 및 2)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

- 1)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

-----  
-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  
-----  
-----  
가. -----  
-----50-----  
-----  
-----

나. -----  
----- 경우  
(주된 업종의 변경은 해당하지 아니한다)

다.·라. (현행과 같음)

- 마. -----  
-----  
1) -----  
-----  
-----5년간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2)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<u>7년간</u> 총 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 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 우	2) ----- ----- ----- <u>5년간</u> ----- ----- 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⑦ ~ ⑪ (생 략)	⑦ ~ ⑪ (현행과 같음)